



연합노보



2015
특보
3.9월

www.newsunion.co.kr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 종로구 을곡로2길 25 / 전화 398-3620~2 / 팩스 398-3630 / 발행인 오정훈 · 편집인 이을·김태균

운명의 10일 ... “부적격 사장 선임 결사반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에서 차기사장 내정

사추위, 김성수 · 박노황 · 박호근 예비후보로 추천

연합뉴스의 미래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뉴스통신진흥회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김성수 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 박노황 연합인포맥스 특임이사, 박호근 전 연합인포맥스 사장에 대한 면접을 거쳐 차기 연합뉴스 사장(이상 가나다순)을 선임한다.

앞서 사장추천위원회는 지난 5일 5명의 연합뉴스 사장 공모 지원자 중 이들 3명을 사장 예비후보로 추천했다.

차기 사장 예비후보를 3배수로 추천키로 한 사추위는 무득표 인사를 제외하고 최다득표자를 뽑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3차례 진행, 1차에서 박노황 후보를, 2차에서 박호근 후보를, 3차에서 김

성수 후보를 각각 예비후보자 리스트에 올렸다.

연합뉴스 노동조합은 사추위가 편향 보도와 인사 전횡으로 2012년 103일간의 파업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이들을 사장 예비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들의 사장 내정을 저지하기 위한 결사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구성원의 70%가 가입된 노조가 조합원의 충의를 모아 차기 사장으로 파업축발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경우는 부적격이라고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진흥회가 주축이 된 사추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연합뉴스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다.

노조는 아울러 언론인으로서 정도를 지키지 못하고 국회의원 선거출마를 타진한 후보 역시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해야 할 연합뉴스의 사장 예비후보로 적합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추위의 절대다수를 점하면서 10일 차기사장을 내정하는 뉴스통신진흥회는 노사화합 · 위기관리 ·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삼아 달리는 구성원들의 염원을 받아 안아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는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진흥회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일이 된다.

노조는 부적격 인사의 차기 사장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결사투쟁에 나선다.

노조는 먼저 9일 낮 12시 30분 서울 마포구 공덕동 뉴스통신진흥회 앞에서 언론노조와 언론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연합뉴스 부적격 사장 후보자 퇴출을 촉구한다. 이에 앞서 연합뉴스 본사 사옥 로비에서 선전전도 진행한다.

노조는 이어 10일에는 오전 10시 연합뉴스 사장을 결정하는 이사회가 시작되기 전에 선전전부터 시작해, 정오에 파업유발 · 정치권 줄대기 인사 퇴출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어 부적격 인사 결사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

성명서

잘못된 역사 반복해선 안 된다

연합뉴스 사장추천위원회는 지난 5일 김성수, 박노황, 박호근을 사장 후보군으로 뉴스통신진흥회에 추천했다. 사추위의 이번 결정은 연합뉴스의 발전과 노사화합을 위해 파업축발자는 절대로 사장에 선임해서는 안 된다고 노조가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이를 강그리 무시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일부 파업축발 인사들은 과거 인사 전횡을 일삼았으며 특히 공정성이 엄정히 담보돼야 할 보도 부문에서 심각한 불공정을 저질렀다. 대표적으로 이들은 4대강 사업 찬미 보도와 한명숙 전 총리 유죄 단정 보도, ‘로봇물고기’ 보도 등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게 기사를 요리했다.

결과는 어땠나. 수십조원을 들인 4대강 사업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총체적 부실로 밝혀졌고, 한명숙 전 총리 역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며 로봇물고기도 무려 57억원의 혈세만 낭비한 사기극으로 결론이 났다. 이들의 편향 보도는 결과적으로 연합뉴스의 이름에 먹칠을 한 참담한 오보로 남게 됐다.

이들이 연합뉴스에 씻을 수 없는 파업의

상처를 안기고 떠난 지 이제 고작 2년이 지났다. 벌어진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은 시점에서 이들의 이름이 사장 후보에 오르내리는 것을 노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렇다고 언론인으로서의 정도를 지키지 못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타진한 후보 역시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해야 할 연합뉴스의 선장으로 적합할지 의문이다.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고자 했던 ‘폴리닐리스트’가 연합뉴스의 사장이 된다고 했을 때 이를 쉽사리 납득할 수 있을 국민들과 독자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최종 사장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는 뉴스통신진흥회는 불공정보도와 인사전횡, 그리고 정부·여당 편향 보도가 지난 2012년 파업의 도화선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노조는 놀라우리만치 당시와 닮은꼴인 연합뉴스 사장 선임 과정이 지극히 우려스럽다.

진흥회가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선택한다면 노조도 다시금 결사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

2015.3.6.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공정한 사장선임 촉구” 조합원 · 언론시민사회단체 한목소리

“연합뉴스 바로 서야 한국언론 바로 선다! 공정한 사장선출 바른 언론 시작이다! 공정보도 쟁취 투쟁! 결사 투쟁!”

3년 만에 다시 목이 터져라 외쳤다. 5일 칼바람이 부는 뉴스통신진흥회 앞 인도는 점심을 거르고 모여든 70여 명의 연합뉴스 조합원들로 매워졌다.

올해 연합뉴스에 이어 사장이 갈리는 KBS노조, EBS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도 함께했다.

연합뉴스의 사장 선출의 첫걸음인 사장추천위원회가 열리는 날을 맞았기 때문이다.

오정훈 연합뉴스 지부장은 “사추위가 정권의 거수기가 되지 않도록 압박하기 위해 2012년 파업 이후 3년 만에 다시 진흥회 앞에 모였다”

2면에 계속



사추위, 부적격 사장후보 어떻게 결정했나

지난 5일 오후 2시에 열린 사장추천위원회는 이례적으로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다. 지금까지 사추위는 오전 10시께 시작해 2시간여 동안 열린 뒤 점심시간을 전후해 끝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번 사추위에서는 논란을 빚고 있는 '사직원' 규정 때문에 지원자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오히려 회의 시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예상까지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사추위 회의에서 상당한 격론이 오갔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사추위원 5명 중에 진흥회 이사 3명이 직접 참여하고 다른 외부 추천인사 중 1명에 대해서도 진흥회가 상당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진흥회는 사실상 사추위를 거의 장악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논의가 격렬했다는 것은 진흥회 영향권의 4인들도 이번 지원자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내리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추위는 예년의 갑절이나 되는 시간 동안 논의하고 3차에 걸친 투표를 통해 박노황 연합인포맥스 특임이

사와 박호근 전 연합인포맥스 사장, 김성수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을 추천했다. 구체적으로 1차에서 박 이사가, 2차에서 박 전 사장이, 3차에서 김 본부장이 추천됐다. 1~3차 투표 내내 특정 후보로 몰표가 집중되는 일은 없었고, 모두 1~2표차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사장 지원자들 대부분은 2012년 파업 이후 제정된 편집총국장 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총국장 제도는 언론사의 기본 중의 기본인 '편집과 경영의 분리'에 충실하고자 노사합의로 마련한 제도다. 이를 고려하면 아직까지 다수 사장 지원자들은 언제라도 편집권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번 사추위는 사장 지원서 접수 마감 바로 다음 날로 일정을 잡은 탓에 위원들이 지원자의 면면을 제대로 살펴볼지 못한 채 임해야 했던 부작용도 있었다. 특히 사추위원 5명 중 2명은 외부 인사인 탓에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에 들어와

야 했다. 노조 추천 이강택 사추위원은 "전날 5시에 마감해서 그 다음날 2시에 사추위를 열었다. 그러다 보니 사장 후보들 면면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사추위원들은 지원자들이 스스로 낸 지원서만 가지고 사추위를 진행해야 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추위는 진흥회가 과도하게 직접 개입하는 구성에서부터, 사추위원들의 취재·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운영, 조합원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파업 촉발 인사를 들이나 추천한 결과 등까지 이른바 '요식행위'라고 불릴 만한 모든 요소를 갖추게 됐다. 이 위원은 이를 기화로 사추위의 구성과 운영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사회 안건으로 개선안을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위원장 편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편집권 독립과 연합뉴스의 미래

지난 5일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예비후보 김성수, 박노황, 박호근 세 사람의 이름을 듣고서 압담함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불공정보도와 인사 전횡으로 파업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장본인들이 사추위 투표를 버젓이 통과했고 정치권에 기웃거리다가 망신을 당한 후보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3년간 연합뉴스를 이끌어 나갈 차기 사장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한탄스럽기도 하고 심한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현실이 압담할수록 과연 우리는 무엇을 주장해야 하고 무엇을 잃어서는 안 되는지 냉철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장 예비후보는 지원서에 지난 파업의 성과인 편집총국장제를 비롯해 임명동의제 등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제도를 없애고, 복지제도 폐지 등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파업의 상처를 치유하고 노사가 연합뉴스의 미래를 위해 뭉쳐야 할 시기에 뉴스통신진흥회가 갈등과 반목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한 인사를 대표이사로 지목한다면, 우리는 결사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장선임 과정에서 공정보도 사수와 부적격사장 퇴출을 위한 조합원들의 확고한 의지와 결집력을 과시하고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제도를 흔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미 그 구성에서부터 정권 편향적인 뉴스통신진흥회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싸움은 우리가 수호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대오가 흐트러지거나 낙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빈틈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집행부를 포함한 지도부는 공정보도 사수와 연합뉴스의 발전이라는 대원칙에 맞게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

연합뉴스 사장 선임 투쟁계획

3/9일(월) : D-1

11:30 본사 사옥 로비 선전전

본사 출입 게이트에서 피케팅, 간이 시위

12:30 <연합뉴스 부적격 사장후보자 퇴출 촉구 기자회견>

서울 마포 뉴스통신진흥회 앞, 언론노조, 언론·시민단체 공동주최

3/10일(화) : D-0

09:00 마포 뉴스통신진흥회 앞 선전전 (집행부)

10:00 차기 사장 결정 진흥회 이사회 개시, 사장예비후보 면접

12:00 <파업유발, 정치권 줄대기 인사 퇴출을 위한 전 조합원 결의대회>

연합뉴스와 관계사 전 조합원 집결 투쟁, 집행부, 지역대위원 연가투쟁

16:00~17:00 진흥회 최종 내정자 선정 투표

17:00 집행부+공보위 연석 긴급 회의

향후 구체적 투쟁 계획 수립.

3/11~25

- 부서별 순번 정해 로비 등 출퇴근·점심 집회(가안)

- 대의원대회와 전조합원 대토론회 거쳐 투쟁방향 결정

3/25(수)

연합뉴스 주주총회, 신임대표이사 내정자, 이사진 추진

☞ 1면에 이어

면서 "불공정보도와 인사전횡으로 촉발된 파업에 주된 책임이 있는 부적격 인사가 선출되지 않기를 염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비장하다"고 말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파업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사장이 된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정권 비판 보도를 지켜 낼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사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오훈 KBS 본부장은 "연합뉴스는 정권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라고 만들어진 국가기간통신사인데 대통령이 사장을 점찍고 보도내용에 개입하고 인사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면서 "연합뉴스 사추위를 시작으로 올해 공영언론 독립을 위한 싸움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영상은 노조 홈페이지와 유튜브(<https://www.youtube.com/embed/Py27nmm99Go>)에서 볼 수 있다. ■